

光日春秋

이서향



남북한이 총리를 대표로 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이래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 역사도 올해로 벌써 17년째가 된다. 고위급 회담을 통해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것이 지난 1991년 12월이었다. 긴장완화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통일의 발판을 놓기 위한 체계적인 남북 대화의 기록이 어느덧 삼년의 나이에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핵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호 교류·협력에 관해 '너무 많은 것을 합의'한 제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역사 속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남관계에 대해 비교적 말을 아껴왔던 북한이 최근 서해안에서 미 핵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호 교류·협력에 관해 '너무 많은 것을 합의'한 제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남북관계 17년의 명암

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함, 마치 붓물 터지듯 대남 비판의 위협적 언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일 노동신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핵·개방 3000'으로 상징되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 비판이 최고조에 이른 느낌이다. 남북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관계 17년의 역사 속에서 북한의 과거 행태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도발적

행동이 새삼 놀랄만한 것은 아니지만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나타나는 북한의 위협적 언행과 의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가? 먼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북한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수 국민의 변화된 보수성향을 반영하여 예전처럼 과감한 대북지원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기대할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대남 공세수위 강화는 우리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며 앞으로 우리보다는 미국 및 중국과의 대화와 거래를 중시하려는 신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최근 북한 언행에 대한 또 다른 가능한 해석은 북한의 우리 정부에 대한 이른바 '길들이기' 전략이다. 우리는 과거 7~8년간 남북간장 완화와 북한의 변화 촉진이라는 명목 아래 비료와 식량 등을 가급적 조건없이 지원해 왔다. 북한의 최근 행동은 우리 정부의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되도록 압력을 넣는 수

단이라는 것이다. 즉, 북한의 행동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경제적 지원이 계속되면 긴장 완화에 협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긴장을 조성하겠다는 이른바 '때쓰기' 전략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행동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물론 북한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일시적 개선보다는 장기적으로 긴장을 근원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실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된 원칙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상호성( reciprocity)과 남북상생(南北相生)의 원칙을 강조해 왔다. 물론 상호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지원하면 북한도 똑같은 양과 방식으로 화답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이려는 것이며 남북상생도 남북 공존·공영에 대한 원칙을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향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간단한 원칙이지만 위의 2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한반도의 진정한 긴장 완화, 그리고 더 나아가 공고한 평화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총선 민심 받들어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제 18대 총선이 여당인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통합민주당은 최소한의 견제세력을 갖추었지만 단독으로는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없게 됐다. 정치권은 총선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정치권이 민의를 국정에서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경제, 특히 서민경제를 살려내라는 것이 이번 총선을 통해 내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본다. 정치권은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다수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균형감각과 국가경영의 전문성을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통합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을 배척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경제 살리기는 기대할 수 없다. 여권은 총선의 승리로 그동안 미뤄왔

던 일들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밀어붙일 일과 그레선 안 되는 일을 제대로 가려서 하라는 것이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이다. 통합민주당은 패배의 원인부터 겸허히 되짚어 봐야 한다. 패배가 오히려 건전하고 합리적인 진보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심기일전해 국정의 한 축으로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우리 정치를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사상 최저를 기록한 이번 총선 투표율이 무엇을 의미하지 지시해야 한다. 정책대결은 사라지고 파벌싸움으로 일궈진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유권자의 발길을 돌리게 한 것이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경제 살리기도, 선진국 진입도 불가능하다. 여야는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를 존중하고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펼쳐 국민이 납득하는 새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주개발에 국가적 역량 결집하자

광주 출신의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씨가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순항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8일 밤 감격과 기대속에 우주선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기지에서 발사되는 장면을 지켜봤다. 소유즈호는 오늘 밤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한다. 이씨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식물 생산 활동과 연구 압력 측정, 극한 대기현상 관측 등 교육·기초과학 실험 18가지를 수행한다. 각종 퍼포먼스와 인터뷰 등 일정을 소화한 뒤 19일 지구로 귀환한다.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주 실험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한국의 첫 우주인 배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4천78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주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와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 과학의 대중화 등 작·간접효과를 모두 합친 것이다. 이번 우주인 개발사업에 투입한 예산 260억원(기간 200억원, 정부예산 60억원)의 18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우주인 배출은 세계에서 36번째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에도 뒤졌다. 중국은 이미 두 차례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달 탐사위성 '창어 1호'를 쏘아올렸다. 일본은 2030년 까지 달에 유인 기지를 세운다는 장기 우주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층 외나로도에서 우주센터 건설하는 등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다. 나로도우주센터는 오는 9월 완공된다. 12월에는 나로도우주센터에서 과학기술위성 2호를 실은 로켓을 발사하게 된다. 세계 9번째 '스페이스 클럽(우주 선진국)' 가입이 유력하다. 하지만 우리의 우주개발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우주를 지배하는 국가'가 21세기를 지배한다는 말에서 드러나듯 강대국들의 우주개발 경쟁은 치열하다. 이소연씨의 이번 첫 우주비행이 우주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4·29 폭동'일이 다가오고 있다. 1992년 4월 29일, 한 흑인 교통위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난폭하게 구타하는 장면이 찍힌 비디오가 공개돼 파고진입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법원에서 경찰관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흑인들은 인종 차별적 불공정 판결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비슷한 시기에 흑인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한국계 여 주인이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는 흑인 소년과 옥신각신 하다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파고진입 논란이 휩싸였던 경찰관들이 무죄로 풀려나자 그에 대한 분노가 영동하게도 한국인에게로 향했다. 많은 한국인들이 흑인지역에서 장사를 하여 돈을 벌면서도 흑인들에 대해 차

또 부모들의 자식들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오로지 의사나 변호사가 되라는 강제적 압박으로 인해 자식들의 부모에 대한 반발이 많았다. 영동하게도 한국인에게로 표적이 바뀐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TV 인터넷부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면 흑인들은 유창한 영어로 자기들의 애국된 주장을 펴는데 반해 한국인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마이크를 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벌어져 자 연히 언론에서는 일방적으로 흑인들의 주장만 방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억울한 상황을 보다 못한 영어권 의 우리 자녀들이 일어섰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잃어버린 줄로만 여겼던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한국인'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그

4·29 LA폭동

별적 시선을 보여온데다가 빈민지역에 사는 그들에 비해 항상 고급차를 타고 다니며 흑인 사회에 기부금 같은 것에 인색한 인종으로 비쳐온 데 대한 평소의 불만이 터진 것이다. 2천300여 곳의 한인 가게가 약탈 또는 불에 탔고 사망 53명, 부상 4천명이라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미국의 경찰들은 사건 현장인 한인 지역을 외면한 채 일본·유대인 타운을 방어하는 데 대부분의 병력을 투입했다. 한인 이민사 100년중 최대 사건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이 사건으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오히려 많았다고 평가한다. 당시 한인교포들의 분위기는 자신의 교육을 위해 이민 길을 택했다고 하는 데도 정작 언어장벽 때문에 심도 있는 대화가 단절되어 그들을 '잃어버린' 세대라 여기는 자포자적 분위기였다.

들 역시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나 영어밖에 모른다 해도 영원히 '한국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가 인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서로가 끌어안는 계기가 됐다. 이 나라에서 정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면 자식들을 각계각층에 골고루 진출시켜야 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 한 2세들이 주류가 되어 불과 하루 전에 계획한 5월 2일 '평화 대행진'에는 10만 명이 참여해 흑인에 대한 원망의 차원을 넘어 인종화합을 외쳤다. 불행은 건설적 방향으로 승화시킨 한인들의 역량 이 미국 주류 언론들로부터 대단한 찬사를 받았던 행사였다.

기고



문인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상징하고 민주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공간으로 '한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을 근거로 그동안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추진되어 오던 이 공간은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 전당으로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전당에는 부지 12만㎡, 건평 4만㎡에 1천400억원의 국비를 들여 상설 전시관, 역사관, 교육센터, 연구소 등이 들어서 명실상부한 민주화 운동의 국가적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공간이며 지구촌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민주주의의 향배 교류하고 함께 노력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전당은 그 설립 배경이나 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도시이자,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에 건립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보여준 광주가 지닌 역사성과 상징성에 서 찾아야 한다. 광주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성과 전국 민주열사의 35%가 묻혀있는 상징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민주정지임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또한, 광주는 우리나라 민주발전을 위

'민주 전당' 광주에 세워져야

그동안 광주시는 한말 의병활동, 광주 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성지이자, 우리나라 민주 발전에 기여해 온 역사성과 상징성에 비추어 전당 건립의 최적지라는 판단 아래 광주 유치에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 2005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민주화운동 관련단체 등에 서한문과 건의서를 전달하고, 조성 후보지를 압축하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전당 건립의 최적지임을 홍보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접근성 등을 이유로 건립 예정지를 서울로 결정하려다 강력한 반대 여론으로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유발시킨 바 있다. 한국 민주주의 전당은 단순히 거대한 건물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이자 민주주

해 민·관이 하나되어 일관된 정책을 펼쳐 온 도시라는 점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6·15한민족대추진, 세계여성평화포럼 등 민주정신을 기리고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은 민주화에 대한 시민적 염원과 열의의 그리고 정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아울러,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민주전당의 광주 건립 약속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이처럼 한국민주주의전당이 광주에 유치되는 것은 그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에서 너무도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다. 세계적인 민주성지이자 대한민국의 대표로서의 의향으로서의 광주 이미지가 더욱 확산 되도록 온 시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소풍 계획 알차게 세워 교육 효과 높이자

얼마 뒤면 초·중·고교에서 봄소풍을 간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소풍의 본래 취지인 야외 현장학습, 자연관찰, 체력단련은 외면한 채 일정 장소에 모여 출석을 점검하고 자유시간을 주었다가 점심 도시락을 먹고는 해산한다. 교사와 학생들도 그저 '수업 않고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다. 60~70년대 소풍은 임축(遠足)이라 하여 자연을 벗어 야외관찰을 하면서 급우들과 오순도순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먼 거리를 걷곤 했다. 요즘은 자동차로 집결지에 모여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고 노래자랑·장기자랑을 벌이다가 오후 1~2시 해산해 버린다. 걷는 것도 없고 대화도 없다.

소풍이 일찍 끝난 학생들은 삼삼오오 영화관에 가거나 전자오락실, 유흥장으로 간다. 교사들도 이날 회식을 한다. 소풍의 본래 취지가 사라지고 만 것이다. 각급 학교에서 보다 유익하고 알찬 행사 계획을 세워 실행한다면 교육적으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즉 자연관찰, 전통 민속놀이, 운동경기, 고적 탐사, 소풍에 대한 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가 있을 것이다. 또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도 벌이면서 자연 보호에도 동참한다면 더 의미 있을 것이다. 그저 노는 날이 아닌 야외교육의 진정한 효과가 있는 소풍날이 되도록 실천이 이뤄졌으면 한다. ▲우정렬·광주시 서구 화정동

지하철역 입구·통로에 안내 시스템 설치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 주위에서 헬레벨 뒹구는 모습을 자주 본다. 다행히 제때 승강장에 도착해 지하철을 타면 좋겠지만 없으면 눈 앞에서 놓치거나, 한참을 기다리게 돼 열심히 땀 보람이 사라지고 만다. 한마디로 아쉽고 헛물을 쵸는 것이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모든 지하철역 입구와 구내 통로에 전광판을 설치, 현재 열차 진행 상황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일부 역에는 그 시설이 설치된 곳도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것은 역 구내에 대한 안내 수단일 뿐이다. 승객이 역으로 진입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김만석·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 차가 다니는 도로에는 횡단보도에 파란불 바뀌는 시간이 나오게 해주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도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지하철역 역시 고객들을 위해 그런 시설을 해줄 필요가 있다. 표시 내용으로는 지하철의 현재 위치, 해당 역 도착 예정시간(또는 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만 표시해주면 된다. 그렇게 되면 고객들도 안내 전광판을 보고 그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편하게 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더 많이 이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같은 서비스를 서둘러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 ▲김만석·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無等鼓

조류 인플루엔자(AI)는 닭과 오리 및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병을 말한다. AI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게 된 것은 지난 1997년 홍콩에서 조류와 접촉한 사람들 중 18명이 감염되고 그중 6명이 사망한 뒤 부터다. 치사율이 33%로 지난 2002년 12월 발생해 800명이 숨진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보다 3배 이상 높다. 그러나 70도 이상 온도에서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삼계탕이나 닭 튀김과 같이 충분히 익힌 고기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전북 정읍과 김제의 양계장과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점차 확산되면서 서 지역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벌써 수십만 마리의 닭과 오리 가 매몰 또는 살 처분됐다. 주로 겨울에 발생해왔던 AI가 봄철에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철새들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기간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재필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이번에도 허술한 방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폐사한지 닷새가 지나서야 신고된데다 방역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문제된 오리 일부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변화에 따라 철새의 이동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채 예년처럼 2월 말로 AI 방역을 중단한 안이한 판단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조류 인플루엔자



AI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닭과 오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신속한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AI가 발생한 일부 농가에서는 비닐 하우스를 개조해 환기가 안 되는 열악한 시설에서 닭과 오리를 사육해 왔다. 전남지역은 지난 2003년과 2006~2007년 겨울에도 AI가 발생해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값비싼 수입료를 얼마나 더 지불해야 근본 대책이 마련될 것인가. /김재필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information.